

소상공인 폐업 연평균 99만개... 절반은 개업 3년 내 문 닫아

(2023~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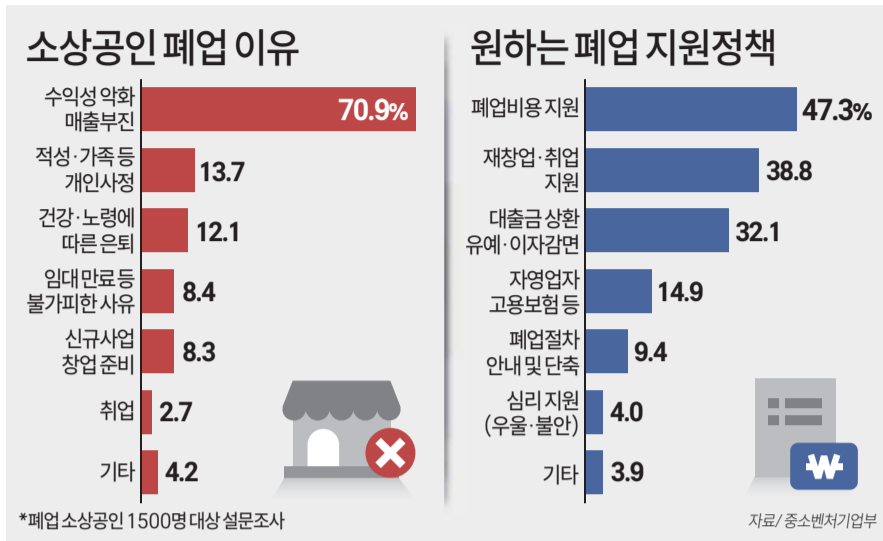
중기부, 국세청 자료 첫 분석
작년 97만5000곳 문 닫아
2024년엔 100만8000곳 넘어
소매 등 6대 업종에 77% 집중
10년 버틴 사업장 13.7% 그쳐
崔 “위기진단·재기까지 지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문을 닫은 소상공인이 연평균 99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24년에는 폐업 소상공인이 100만개를 넘어섰다.

소상공인이 많이 몰려 있는 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 등 ‘6대 업종’이 전체 폐업의 77%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소매업 폐업이 가장 두드러졌다. 폐업 소상공인 2곳 중 1곳은 3년을 버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상공인 대부분은 정상 매출에서 40% 이상 줄었을 때 폐업을 결심했다. 결심부터 실제 폐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7.7개월이었다. 또 절반에 가까운 폐업 소상공인은 문을 닫으면서도 대출금 갚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폐업자 현황’을 분석



(정량통계)하고, 폐업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정성통계)를 해 30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중기부가 폐업 소상공인 분석 자료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 숫자는 2023년 98만6487개, 2024년 100만8282개, 2025년 97만5681개로 각각 나타났다. 이 기간 폐업률은 각각 9.02% (2023년), 9.04% (2024년), 8.64% (2025년)였다. 최근 1년새 폐업 숫자가 3만2601개 감소한 것과 함께 폐업률도 0.4

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의 폐업이 숫자(89만411개), 폐업률(9.06%)에서 법인사업자(8만5270개, 5.79%)보다 월등히 높았다. 개인사업자 중 폐업 숫자로는 일반사업자(48만3210개), 폐업률로는 간이사업자(12.15%)가 많았다.

보통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매매업·임대업을 제외한 폐업률은 지난해의 경우 10.14%로 전체보다 높았다. 숙박업, 도매업, 제조업까지 포함한 ‘소상공인 6대 업종’의 폐업률도 2025년 기준

11.08%로 역시 전체 폐업률(8.64%)보다 두드러졌다. 이 중에서 소매업은 지난해에만 28만1995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매업 폐업률은 15.4%로 전체 폐업률을 크게 웃돌았다.

2025년 기준 폐업 소상공인의 50.9%는 문을 연지 3년 이내인 것으로 파악됐다. 10년 이상 영업을 한 곳은 13.7%에 그쳤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폐업 실태 결과 ‘문을 닫은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 악화·매출부진’ (70.9%)이었다. 이외에 ‘적성·가족 등 개인 사정’ (13.7%), ‘건강·노령에 따른 은퇴’ (12.1%) 등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폐업 결심 시점’은 절반이 훌쩍 넘는 64.4%가 ‘정상 매출액의 40% 이상 감소 시’ 폐업을 결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폐업 결심 당시 68.5%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부채 금액은 8531만원이었다. 특히 60대 이상 부채가 9897만원으로 파악되는 등 나이가 많을수록 부채도 많았다.

평균 폐업 비용은 1286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점포정리 비용(559만원)이 가장

많이 들었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은 폐업 비용 지원(47.3%)을 가장 확대돼야 할 폐업 지원 정책으로 꼽았다.

‘폐업시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45.5%가 ‘대출금 상환’이라고 답했다. ‘폐업 시점 결정’(37.3%), ‘보증금·관리금 회수’(30.7%)도 그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들은 폐업 이후에도 애로가 적지 않았다.

‘가계 생계비 부족’(40.5%), ‘채무로 인한 경제활동 곤란’(22.1%), ‘향후 경제활동 대안 부재’(19.4%) 등을 주로 겪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은 ‘갓고 있던 재산’(33.8%)이나 ‘근로(취업) 소득’(32.8%)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한번의 폐업이 소상공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절벽이 되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폐업 소상공인 관련 통계를 입체적으로 연계해 폐업 전 위기 진단·알림부터 폐업 이후 재기까지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석화업계, 에틸렌 부진에 ‘고부가 소재’ 전환 가속

LG화학, 첨단소재 R&D 확대
롯데케미칼, 기능성 소재 강화
한화솔루션, 태양광으로 완충



전남 여수석유화학단지. /뉴스시스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고부가 소재와 비화학 사업을 앞세워 수익성 방어에 나서고 있다. 래깅 효과가 견인된 에틸렌 스프레드 부진과 역래깅 부담, 중국발 공급 과잉이 맞물리면서 범용 석유화학 중심의 사업 구조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아서다. 첨단 소재와 스페셜티 제품으로 사업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지만, 범용 제품 부진을 모두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비효율 설비 조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범용 석유화학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 소재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고 있다. 2035년까지 연구개발(R&D)에 15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등 미래 성장

분야의 소재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석유화학 시황에 좌우되는 범용 제품 비중을 줄이고 저유전 소재, 열관리 소재, 유리기관 등 첨단 산업용 소재를 키워 수익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탄소 저감 기술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LG화학은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지속가능항공유(e-SAF)를 생산하는 기술 실증에 나서며 탄소 포집·활용 분야 사업화가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기존 석유화학 제품

중심의 성장 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만큼 탄소 저감 기술과 고부가 소재를 함께 키워 업황 변동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롯데케미칼은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30년까지 기능성 소재 비중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첨단소재, 정밀화학, 배터리 소재, 수소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회사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전남 울촌산단에 연 50만톤 규모의 컴파운딩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모빌리티·IT용 고성능 소재와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군을 확대할 예정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현상액(TMAH)과 배터리용 동박, 피지컬 AI·항공·우주용 슈퍼 엔지니어링플라스틱(Super EP), 리사이클 소재 솔루션도 고부가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한화솔루션은 케미칼 부문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강화를 함께 추진하

고 있다. 케미칼 부문에서는 원가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큐셀을 중심으로 미국 태양광 생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내 태양광 셀·모듈 생산 확대는 석유화학 업황 부진을 일부 완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쟁이나 일시적인 공급 차질이 끝나면 결국 시장은 다시 공급 과잉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범용 제품으로는 중국 업체와 경쟁하기 어려운 만큼 기술적 해지를 가진 소재와 고객 맞춤형 제품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 구조 전환이 범용 석유화학 부진을 온전히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페셜티 제품은 수익성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규모 설비를 기반으로 매출을 올려온 범용 제품의 공백을 메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원관희 기자 wkh@

중기중앙회 익명제보센터 강화 논의 불공정거래 발굴 기대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등 공정거래 정책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분회에서 ‘2026년 제1차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련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이날 자리에는 위원장인 정한성 한국파스나공업협회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협동조합·학계·법조계·연구계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과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조사과의 발표를 청취하고 공정거래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도급 연동제 등 현안 점검
업종별 사례 모아 제도개선

참석 위원들은 거래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해 불공정거래를 신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구조적·반복적 불공정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 취지에 공감했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직권조사 및 엄중 제재를 통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이라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동시에 업종별 불공정거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정한성 위원장은 “위원회가 업종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향후 공정거래 제도 개선 논의에 의미 있는 정책 제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정부 실증·구매 사업, 스마트도시로 확대 SK케미칼, 스카이펠로 데코시트 유연성 ↑

중기부, 기상청 등 18개 기관 참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를 로봇 분야에 이어 스마트도시 분야로 확대한다.

30일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는 로봇, 스마트도시 등 신산업 창업기업의 연구개발(R&D) 성과가 정부·공공기관 실증을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시범구매 및 해외실증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1차 ‘로봇’ 분야에선 경찰청 등 5개 정부기관이 수요기관으로 참여해 20개 협업

과제를 공모했다. 실증을 신청한 총 31개의 창업기업을 평가한 결과 최종 13개사가 선정됐다.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현장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에서도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사 내에서 벤처기업의 물품 배송·운반 로봇 실증·구매를 진행 중이다.

실증을 진행하는 트위니는 올해 중기부의 유니콘브릿지 사업에 선정된 잠재 유니콘 기업이다. 트위니의 ‘나르고60’은 최대 60kg의 화물을 적재하고 스스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자율주행 물류 배송 로봇을 말한다.

/김승호 기자

도레이첨단소재와 공동 개발
한솔홈데코 마감재에 적용

SK케미칼이 탄소소재 스카이펠(SKYPEL)을 가구·인테리어용 데코시트에 적용하며 스페셜티 소재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SK케미칼은 도레이첨단소재와 함께 스카이펠을 적용한 유연 데코시트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소재는 한솔홈데코의 가구·인테리어 마감재인 ‘스토리필름(Story Film)’에 적용돼 기존 제품의 가공성과 적용성을 높인 업그레이드 제품으로 구현됐다. 이번에 개발된 데코시트는 고급 인테리어와 가구용 마감재로 사용돼 온 GAG PET 필름의 장



스카이펠(SKYPEL)이 적용된 스토리 필름이 적용된 주방 하부장 모습. /SK케미칼

점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강화한 제품이다. GAG PET 필름은 PET 기반의 GAG(Glycol-modified Amorphous Polyester) 구조를 적용한 복합 시트 소재로 높은 투명도와 광택, 선명한 색감 구현이 가능해 고급 가구와 인테리어 마감재에 활용돼 왔다.

/원관희 기자